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청소년 등 관련 기자 분들
발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 검은빛 , 대구지부 : 진냥 asunaro@asunaro.or.kr)
제목	<논평> 가해학생의 처벌이 핵심이 아니다. 폭력과 경쟁, 배제가 지배하는 지금의 학교를 바꾸어내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다.
날짜	2011. 12. 31.
붙임	

<논평>

**가해학생의 처벌이 핵심이 아니다. 폭력과 경쟁, 배제가 지배하는
 지금의 학교를 바꾸어내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다.**

대구의 한 중학생이 ‘물고문’을 비롯한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시교육감은 “어린 생명과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공개 사과 하였고, "철저하고 다양한 신고시스템으로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의 폭력도 없애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협조해 보복 등의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대구 시내 각 학교에서는 방학 중 상담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방지 등에 관한 동영상 시청교육과 각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8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9일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이 대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의 청소년자살율이 세계 1위라는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해마다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전체 청소년의 10%가 자살을 고민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책을 논의한다는 회의들이 줄잇는 동안에도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생이 또 세상을 등졌고 광주의 한 학생 역시 우리 곁을 떠났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광주의 자살 사건 관련 보도를 보면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초기에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지금은 학생 간 폭력이 배경이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향후 대책도 피해자 신고와 제삼자 고발을 장려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모두 다 ‘누가 가해자인가’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격리(제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목격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던 이유는 지금의 학교와 사회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목격자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가해자를 막고 나설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경쟁과 낙오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없이 배제시켜버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피해자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와 통제는 이미 지나치다. 피해자가 매일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지만 학교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던 것은 학교의 통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을 폭력과 통제 속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무력화시켜 입시기계로 전락시킨 한국 사회 때문이다.

진정한 대책은 폭력이 지배하는 지금의 학교, 경쟁과 배제라는 왜곡에서 교육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해 이 사회가 강력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힘세고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남아있는 한, 통제받고 규제받는 약자들은 탈-권력화될 것이며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저항하고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학생에게 정치적 표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학교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바꾸어내는 것이며 한국 교육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일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